

인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9.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2
V. 종합 의견	14

I. 일반개황

면적	3,287천km ²	G D P	18,752억 달러 (2012년)
인구	1,237백만 명 (2012년)	1 인 당 GDP	1,516달러 (2012년)
정치체제	연방공화제	통화단위	Rupee
대외정책	비동맹 중립	환율(달러당)	53.44 (2012년 평균)

- 인도는 서남아시아에 위치한 연방공화국으로,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자립지향적 수입대체형 경제체제를 유지해왔으나 1991년부터 자유화정책을 채택, 경제개혁 및 대외개방을 추진해오고 있음.
-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다변화된 산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어 구사능력과 숙련된 기술을 겸비한 저임노동력이 풍부하고 IT 산업의 경쟁력이 세계적인 수준임. IT 기술을 바탕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콜센터 등 글로벌 아웃소싱이 인도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함.
- 경제성장세 둔화, 재정수지 적자 지속 및 경상수지 적자 심화 등으로 인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인도 정부는 경제개혁 및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음. 하지만 2014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집권 UPA 연정의 하원 과반 의석이 붕괴되면서 현 정권의 정책추진력이 약화되었음.
- 인구가 12억 명에 달하며 중산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내수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저축률과 투자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열악한 인프라, 만연한 부정부패와 관료주의 등은 인도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f
경제성장률	8.3	10.5	6.4	3.3	5.5
재정수지 / GDP*	-6.5	-4.8	-5.7	-4.9	-5.1
소비자물가상승률	10.9	12.0	8.9	9.3	9.6

* 중앙정부의 재정수지(지방정부 재정 불포함)

자료: IMF, EIU.

□ 경제개혁조치 추진 및 양호한 기후조건으로 경제성장세 회복 전망

- 경기부양정책에 따른 민간 소비 증가로 2009년 경제성장률은 8.3%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 경제성장률은 농업 생산 증가와 산업생산 및 서비스 분야의 호조 지속으로 10.5%를 기록하였음.
- 2011년에는 물가 상승에 따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하반기부터 성장이 둔화되어 경제성장률이 6.4%에 그쳤으며, 물가 상승 지속, 성장세 둔화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심리 악화, 유럽위기로 인한 수출 정체 등으로 2012년 경제성장률은 3.3%로 위축되었음.
- 2013년에는 경제개혁조치 실시 및 양호한 기후조건에 따른 농업 생산량 증가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5.5%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2013/14회계연도 1분기(4~6월) 경제성장률이 4.4%을 기록하는데 그쳤으며,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RBI)이 루피화 환율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20일 기준금리를 7.5%로 0.25%p 인상한 바 있어 성장률 개선이 5.5%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상존함.

□ 연료보조금 개혁과 루피화 약세로 9%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유지 전망

- 2009년 자연 재해로 인한 국내 농업생산 감소 및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국제 상품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0.9%를 시현하였고, 2010년 에도 수입물가 상승, 해외자본 유입 확대에 의한 제조업물가 상승으로 12.0%를 기록함.

- 인도중앙은행이 기준금리(Repo rate)를 2010년 3월 4.75%에서 2011년 10월 8.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함에 따라 201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8.9%로 다시 하락하였으나, 2012년에는 루피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식료품 및 유가 인상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3%를 기록함.
- 국제적인 소비재 가격 안정세와 농업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료 보조금 개혁 추진에 따른 유가 상승, 루피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20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9.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 지속**

- 비효율적인 조세제도 및 낮은 소득세 징수율로 인한 세수 부족, 연료, 식료품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선심성 정책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로 인하여 인도 정부의 재정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09년에는 총선에 따른 선심성 정부지출 증가, 물품세 및 관세 수입 감소 등으로 재정적자가 GDP의 6.5%를 기록하였으나,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 등으로 2010년 재정적자는 GDP의 4.8%로 축소되었음.
- 2011년에는 물가 상승에 따른 보조금 부담 증가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5.7%로 증가함. 그러나 2012년에는 정부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자본지출을 축소하면서 동 비율이 4.9%로 하락함.
- 한편, 지방정부를 포함한 인도의 재정수지 적자는 2011년 및 2012년 각각 GDP 대비 8.4% 및 8.3% 수준에 달함.
- 정부는 보조금 축소, 공기업 지분 및 2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매각 등을 통한 재정적자 축소 방안을 발표했으나, 성장세 둔화,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한 세입 감소, 2014년 총선을 앞둔 정부의 선심성 정책 추진 등으로 2013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5.1%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쌍둥이적자 지속으로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시 자본이탈에 취약**

- 각종 보조금 지급, 부실 공기업 지원, 선심성 정책 실시 등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중앙정부 기준)이 과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소득증가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 석유와 금 수입 급증으로 경상수지 역시 급속히 악화되면서 쌍둥이적자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

- 특히 연료보조금 지급과 고인플레이션이 쌍둥이적자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연료보조금 지급에 따라 석유류 수요가 비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를 악화시켰으며, 고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실물자산 투자수요 확대는 금 수입 증가로 이어져 경상수지 악화를 가속화함.
- 2009~12년중 주로 주식투자 및 은행차입 형태로 총 2,275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인도에 유입되었는데,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 종료에 따라 동 자금이 이탈할 경우 외환보유고 고갈, 환율 급변 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위험이 높음.
- 인도의 높은 저축률, 은행에 대한 국채보유 규제(예금의 23%를 국채로 보유하도록 요구)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분은 국내에서 조달이 가능하나, 외국인투자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적완화 조치 철회시 경상수지 적자분에 대한 인도의 조달 부담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평가됨.

□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만연

- 인도는 심각한 관료주의와 복잡한 행정업무로 행정 효율성이 낮으며, 지방정부의 권한이 커서 중앙정부 승인사항이라도 지방정부의 반대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사업개시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사업개시 후에도 세무, 노동문제 발생시 해결이 어려움.
- 세계은행이 2012년 10월에 발표한 Doing Business 2013에 따르면 인도의 기업경영여건 중 사업개시 부문은 조사대상 185개국 중 173위, 건설허가 부문은 182위, 계약집행 부문은 184위를 기록함.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12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2)에 따르면, 인도는 36점을 기록하여 조사대상 176개국 중 스리랑카(79위), 중국(80위)보다 낮은 94위로 평가됨.
- 2008년 2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입찰 및 2005~2009년 석탄 채굴권 배정 관련 부정부패 사건으로 인한 국고 손실액은 각각 390억 달러 및 33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나. 성장 잠재력

□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내수시장

- 최근 경제성장으로 중산층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 중산층 인구는 2010년 1억 6000만 명에서 2015년 2억 6700만 명, 2025년에는 5억 4,700만 명으로 증가하여 거대한 내수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현재 15세~64세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65.2%로 높으며, 14세 이하 인구 비중은 29.3%에 달하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5.6%에 불과함. 인구구조상 향후 지속적인 경제활동인구 증가가 예상되어 풍부한 노동력 공급에 따른 경제성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다변화된 산업 구조와 높은 저축률 및 투자율

- 2012년 인도의 산업별 비중은 농업 17.4%, 제조업 26.1%, 서비스업 56.5%를 보이고 있는 등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다변화된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영어 구사능력과 숙련된 기술을 겸비한 풍부한 저임 노동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IT산업 지원정책에 힘입어 IT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이며, IT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 및 유럽과의 시차를 이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래밍, 콜센터 등 글로벌 아웃소싱이 증가하고 있음.
- 한편, 2012년 인도의 저축률 및 투자율은 각각 GDP의 29.8% 및 34.9%를 기록하여 인도 경제의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음.

□ 열악한 인프라로 인한 경제성장 제약

- 도로, 항만, 전력, 통신부문 등의 낙후된 인프라가 인도의 경제성장률을 매년 1~2%포인트 하락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 열악한 교통인프라로 인한 식료품 물류 지연이 식료품 가격상승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 또한, 전력 인프라 부족도 심각하여, 2012년 전력 부족율은 평상시 기준 9.3%, 피크 시에는 10.6%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 7월말 대규모 정전사태도 발생한 바 있음.
- 그러나, 부정부패, 지역주민의 반발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그에 따른 사업비 증가는 인프라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함.

- 세계경제포럼의 2013-2014년 글로벌 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3-2014)에 따르면 인도의 인프라부문 경쟁력은 조사대상 148개국 중 85위에 해당되어, 중국(48위), 인도네시아(61위), 베트남(82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도로(84위), 전력공급(111위) 부문에서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한편, 인도 정부는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2012~2017년) 중 인프라 부문에 약 1조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다만, 과도한 재정적자로 인한 정부의 투자여력 부족으로 인도 정부는 인프라 펀드 조성, 면세채권 발행 허용 등을 통해 투자액의 47% 가량을 외국인투자 등 민간재원으로 조달할 계획임.

다. 정책성과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개혁 조치 지속

- 최근 인도 정부는 경제성장세 둔화, 조세 및 사업권 관련 불확실성 증가, 부정부패 등으로 악화된 외국인 투자 심리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내놓고 있음.
- 2012년 인도 정부는 단일브랜드 및 멀티브랜드 소매 유통업, 항공업, 전력 거래 및 방송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3/14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급과세제도 도입 연기를 명시함.
- 슈퍼마켓, 할인점 등 멀티브랜드 소매 유통업 개방은 2011년에도 추진되었지만 연정 내 일부 세력 및 야당의 거센 반발로 철회된 바 있으나, 2012년에는 상하원 모두의 동의를 확보하는데 성공함.
- 인도 정부는 2013년 7월, 통신, 단일브랜드 소매 유통업, 정유, 보험, 국방 등의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경제개혁안을 발표함.

□ 식량안전법 통과 등 선심성 정책 추진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 전망

- 2012년 취임한 치담바람 재무장관은 점진적 재정수지 적자 축소를 통해 2017년에는 재정적자를 GDP의 3%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유류 및 식료품 보조금 축소, Oli India Ltd. 등 주요 공기업 지분 및 이동통신 주파수 매각, 공기업의 배당 확대 등 재정건전성 제고 조치를 연이어 추진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 그러나 2013년 9월 식량안전법(Food Security Bill)이 인도 상원을 통과하였음. 빈민층에 대한 식료품 보조금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동법 시행으로 정부의 식량보조금 부담 증가에 따른 중장기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함.

3. 대외거래

□ 루피화 약세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축소 전망

- 지속적인 서비스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석유 및 금 가격 상승, 경제성장과 점진적 무역 자유화 등에 따른 수입수요 증대로 상품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경상수지 적자 역시 2009년 이후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글로벌 경기침체로 상품수출이 전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상품수입의 약 45%를 차지하는 석유 및 금 수입의 증가로 2012년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각각 2,017억 달러와 915억 달러로 확대되었음.
- 루피화 약세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증가, 연료보조금 축소에 따른 석유수입수요 감소, 금 수입관세 인상 등으로 2013년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는 2012년 대비 다소 축소된 908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f
경 상 수 지	-26,186	-52,275	-60,038	-91,470	-90,808
경상수지/GDP	-2.0	-3.1	-3.1	-4.9	-4.5
상 품 수 지	-79,950	-96,239	-116,413	-201,666	-217,145
수 출	167,958	225,915	299,387	301,853	310,381
수 입	247,908	322,154	415,800	503,519	527,526
외 환 보 유 액	258,583	267,814	262,933	261,656	264,418
총 외 채 잔 액	260,900	305,900	345,700	404,500	543,100
총외채잔액/GDP	19.5	17.9	18.0	21.6	26.9
D S R	5.0	5.1	5.8	5.7	5.8

자료: IMF, OECD, EIU.

□ 개혁개방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시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가능

- 대(對) 인도 외국인직접투자는 서비스산업(금융업 포함),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통신 등 ICT산업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열악한 인프라, 부정부패 만연, 토지 수용 및 환경 규제 등과 관련된 복잡한 행정절차, 지방정부의 반대로 인한 투자 지연 등이 외국인직접투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함.
- 대 인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08년 434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09년 356억 달러, 2010년 265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감소 추세를 보였음. 석유 및 철강 산업에서의 대형 사업 추진으로 2011년 342억 달러로 증가함.
- 경제성장세 둔화, 고물가, 정부 재정적자 증가 등 거시지표 불안, 2012년 초 시행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금 소급과세 시도 및 면허 취소 등에 따른 투자 심리 악화로 2012년 대 인도 FDI가 240억 달러로 급감하였음.
 - 인도 정부는 2012년 3월 인도 기업을 인수한 외국기업에 대하여 과거 비과세 자본거래에 대한 자본이득세의 소급과세를 위한 세법 개정을 발표하였으며, 동년 2월 인도 정부는 노르웨이 Telenor, 러시아 Sistema, 일본 NTT 등 외국사업자가 2008년 취득한 통신면허 122건을 취소함.
- 유류 및 식료품 보조금 축소, 공기업 지분 매각,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 2012년 하반기 이후 정부가 발표한 각종 개혁정책 시행에 따라 투자심리 개선이 가시화된다면 2013년도 인도 외국인직접투자는 330억 달러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2013년 중 대외채무 지표 악화 전망

- 2012년말 기준 총외채잔액은 4,045억 달러로 GDP 대비 대외채무 비중은 21.6%를 기록하여 2011년 대비 다소 악화되었으나,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5.7%로 소폭 개선되었음.
- 2013년에도 경상수지 적자, 포트폴리오 투자자금 이탈 등으로 대외채무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GDP 대비 대외채무 비중이 27%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현 정권의 정책 추진력 약화

- 2009년 실시된 제15대 총선에서 만모한 싱 총리, 소냐 간디 등이 속한 국민의회당 중심의 통일진보연합(UPA)이 압승을 거둬서 재집권에 성공하였으나, 경기 침체 및 연이은 부정부패 스캔들로 최근 지지율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
- 2012년 이후 트리나몰의회당(TMC)과 드라비다진보연맹(DMK)의 UPA 연정 탈퇴에 따른 하원 과반수 상실, 국민의회당 내 싱 총리와 당수인 소냐 간디 간 불화설 제기 등으로 현 정권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됨.
- 다만, 일부 군소정당이 여전히 UPA에 우호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야권 분열로 싱 총리에 대한 불신임투표 추진이 어려워 2014년 총선 까지 UPA 정권이 유지될 것으로 보임.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다민족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문화로 사회불안 미미

- 다양한 종교, 민족, 언어 등이 공존하고 있으며, 지역간 경제발전 수준 및 소득 격차가 크고, 최근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라 계층간 빈부격차 또한 심화되는 등 사회 구조가 복잡함.
- 일반화 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의식, 인내와 관용의 국민성이 인도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구조를 포용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한편, 카스트제도는 공식적으로 이미 철폐되었으며 동 제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종교와 함께 많은 인도인들이 동 제도를 여전히 숙명적으로 수용하고 있어 인도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카스트제도가 역할을 하고 있음.

□ 공산반군에 의한 빈번한 폭력사태 발생

- 인도 중동부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낙살라이트(Naxalite)로 불리는 인도 마오주의 공산반군들의 폭력사태가 자주 발생함.

- 2013년 5월, 집권당인 국민의회당의 고위당직자 일행에 대한 공산반군의 공격으로 25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크게 다치는 사태가 발생함.
- 인도 정부의 진압활동 강화에도 불구하고 마오주의 공산반군은 빈곤 지역 위주로 활동하면서 인도 하층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어 정부의 반군 세력 근절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3. 국제관계

□ 실용주의적 대외관계 노선 추구

- 인도는 모든 국가와 균형을 유지하며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고 급속한 경제성장 및 높은 성장 잠재력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국의 실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실용주의적 대외관계 노선을 추구하고 있음.
-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일본-독일-브라질과의 공동 협력, 남아시아지역협력체(SAARC) 주도, 주요 강대국 및 신흥개도국과의 협력체 등 다양한 협력기구 참여 등을 통해 자국의 국제적인 위상 강화에 노력하고 있음.

□ 국경분쟁 등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과의 관계 개선 노력 지속

- 1947년 파키스탄이 종교 문제로 인도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래 양국은 카슈미르 지역 영유권 및 테러 등으로 잦은 분쟁을 겪어 옴.
- 카슈미르 영유권 분쟁으로 세 차례 전쟁을 치른 후 현재 휴전 상태에 있으나 총격전이 간헐적으로 벌어지고 있음. 한편, 2006년과 2008년 뭄바이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역시 양국 관계를 급랭시킨 바 있음.
- 다만, 최근 인도의 파키스탄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제한 철폐, 파키스탄 국민에 대한 비자 요건 완화, 파키스탄의 인도에 대한 최혜국대우 부여 등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되고 있음.

□ 중국과의 정치적 긴장관계 속에서 경제적 실리 추구 병행

- 인도는 중국과 서북부 잠무-카슈미르와 동북부 아루나찰프라데시 등 약 125천km²에 달하는 지역의 영유권 분쟁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음.

- 2012년 12월 국경선 확정을 위한 제16차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었으나, 양국의 견해차가 커 국경 확정은 난항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중국이 전자 여권에 분쟁지역을 자국 영토로 표기하여 인도가 반발하는 등 간헐적으로 영토 문제로 인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은 인도의 최대교역 대상국으로 양국간 교역규모를 2012년 660억 달러 수준에서 2015년 1천억 달러까지 확대시키기로 합의하는 등 실리적인 측면에서 경제협력 관계를 병행하는 양상을 보임.
- 다만, 2012년 대중무역에서 발생한 인도의 무역적자가 290억 달러에 달하여 무역 불균형 문제가 매우 심각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

- 인도는 대외채무를 재조정할 바 없고, 2012년말 기준 외환보유액 규모가 2,617억 달러에 달하고 있음. 또한, 총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도 약 25%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대외지급능력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 한편, RBI에 따르면 2013년 9월 13일 현재 인도의 외환보유액은 동년 3월말 대비 125억 달러 감소한 2,472억 달러 수준을 유지함.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모두 투자적격등급 유지

- S&P, Moody's, Fitch 등 주요 국제신용평가기관은 최근 인도 루피화 환율 불안정에 따른 경제위기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도에 투자적격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 Moody's, Fitch와 S&P는 각각 2004년, 2006년, 2007년 인도의 외화표시 장기채권 등급을 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후 등급을 유지함.
- S&P는 경제성장세 둔화 및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 등을 이유로 2012년 4월 신용등급 전망을 Stable에서 Negative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Fitch는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개혁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2013년 6월 신용등급 전망을 Negative에서 Stable로 조정함.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B2	(2013. 9.)	B2	(2013. 2.)
OECD	3등급	(2013. 6.)	3등급	(2012. 3.)
S&P	BBB-	(2012. 4.)	BBB-	(2010. 3.)
Moody's	Baa3	(2013. 9.)	Baa3	(2011. 8.)
Fitch	BBB-	(2013. 6.)	BBB-	(2012. 6.)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수은 : 최고 부보율 적용
- 영국ECGD : 최고 부보율 적용
- Euler Hermes : 단기전액인수가능
- 네덜란드 Atradius : 최고 부보율 적용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73년 12월10일 (북한과는 1973년 12월 10일)

□ 주요협정 : 무역경제기술협력협정(1974년), 과학기술협력협정(1976년, 2006년 개정), 이중과세방지협약(1986년), 투자보장협정(1996년), 세관협력협정(2006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2009년 체결, 2010년 1월 발효)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 인도는 우리나라의 제9위 수출 대상국(2012년 기준)으로, 인도와의 교역 규모는 2010년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발효 등에 힘입어 2009년 122억 달러에서 2010년 171억 달러, 2011년 205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2012년 교역규모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188억 달러에 그침.
- 2013년 8월 현재,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4.6% 감소한 77억 달러, 수입은 3.9% 감소한 40억 달러를 기록하여 117억 달러의 교역규모를 시현함.

<표 4> 한·인도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11	2012	2013.8.	주요품목
수 출	12,654	11,922	7,662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석유화학합성연료
수 입	7,894	6,921	4,020	나프타, 사료, 알루미늄
합 계	20,548	18,843	11,682	

자료: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의 대 인도 해외직접투자는 2013년 6월말 현재 제조업을 중심으로 696건, 29억 542만 달러(누계 기준)를 기록하고 있음.

V. 종합 의견

- 물가 상승 지속, 성장세 둔화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심리 악화, 유럽위기로 인한 수출 정체 등으로 2012년 경제성장률은 3.3%를 기록하였으나, 2013년에는 경제개혁조치 실시 및 양호한 기후조건에 힘입은 농업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5.5%로 상승할 전망이다.
- 루피화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식료품 및 유가 상승 등으로 20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9.3%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서 9.6%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2012년 재정적자는 자본지출 축소로 GDP의 4.9%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 추진 등으로 2013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5.1% 수준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상품수출 정체로 2012년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는 각각 2,017억 달러 및 91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루피화 약세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증가, 금 수입관세 인상 등으로 2013년 경상수지 적자는 2012년 대비 다소 축소된 908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개혁안 추진에 반발하여 UPA 연정 내 일부 세력이 탈퇴함에 따라 동 연정의 하원 과반 의석이 붕괴되었음. 야권 분열 등으로 현 정권이 2014년 총선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현 정부의 정책 추진력 약화는 불가피해 보임.
- 대외채무를 재조정할 바 없으며 총외채잔액 중 단기외채비중이 약 25%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고 외환보유액 규모는 2012년말 기준 2,617억 달러, 2013년 9월 13일 기준 2,472억 달러에 달하므로 단기적으로 대외지급능력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책임조사역 임영석 (☎02-3779-5704)

E-mail: yslim@koreaexim.go.kr